

불안한 장세에 금값 ‘고공행진’ 투자자들, ETF·달러 사들인다

실물 금·ETF로 쏠리는 자금
금 관련 펀드 수익률도 급등
외화예금 5영업일 만에 40억↑
“지키는 투자” 자산 방어 확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광중씨(가명·55)는 최근 민간 업체인 A금거래소에서 1kg짜리 골드바(금괴) 10개를 샀다. 금액으로는 약 16억원이다. A씨는 “금융시장이 출렁일 때는 금만 한 게 없다. 장기간 금을 갖고 있으면 가격이 오른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금융자산으로 20억원가량을 보유한 자영업자 B씨(40)는 지난 21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금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했다. 21일(현지시간) 미 동부시간 3시 45분 기준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3428.39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3.03% 올랐다. 금값이 치솟고 있는 만큼 금 상품 투자의 적기라고 봤다.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선 ‘안전자산’으로 통하는 금과 달러를 사들이는 경우가 잇따른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나빠지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발생하면 돈 가치는 떨어진다. 그런데 실물자산인 금을 사두면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자 ‘저가 매수’에 나선 투자자도 늘었다.

23일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난 3개월(1월 23일~4월 23일) 간 ‘ACE KRX금현물’의 수익률은 15.65%를 기록했으며, 4755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같은 기간 해당 ETF를 포함한 국내 금 관련 ETF 7개 평균인 약 854억원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같은 기간 ACE 골드선물 레버리지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 종로본점을 찾은 시민이 골드바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대표적 안전 자산인 금 가격이 최근 연일 급등하며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도 수익률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뉴시스

(합성H) 38.23%, TIGER 골드선물(H) 18.49%, KODEX 골드선물(H) 18.64% 등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 격화로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금값이 폭등한 영향으로 보여진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국제 금시세는 전날보다 2.10% 하락한 온스당 3308.49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전날에는 장중 온스당 3504.12달러까지 오르던 3500달러를 넘겨 사상최대치를 돌파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금 가격이 온스당 40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JP모건 등은 금값이 내년 중반까지 온스당 4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공통된 전망을 내놨다. JP모건은 “금에 대한 지속적인 강한 투자가 있고 중앙은행의 금 수요도 계속되고 있다”며 “금값이 올해 안에 평균 3675달러를 넘긴 뒤 2026년 2분기에 40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내 증권사 영업점 A센터장은 “자산가들은 재산 지키는 걸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현금 보유를 늘리고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고액 자산가들과 상담하는 은행 프라이빗뱅크(PB)들은 최근 달러가치가 싸질 때마다 달러를 사려는 주문이 늘었다고 전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7일 기준 달러예금 잔액은 607억44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말의 580억2000만달러보다 4.7% 증가한 수준이다. 5대 은행의 달러예금 잔액은 이달 들어 지난 10일 563억5천만달러까지 더 줄었다가, 이후 17일까지 불과 5거래일 만에 40억 달러 넘게 다시 증가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요즘 고객들이 단기적인 환율 등락에 따라 외화예금을 적극적으로 사고파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전력변환 기술로 글로벌 시장 공략”

코스닥 CEO 인터뷰

강 찬 호 이지트로닉스 대표

전기차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핵심 부품인 전력변환장치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전기차, 수소차, 충전 인프라 등 전력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제어하는 이 기술을 앞세워 국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전력전자 전문 기업 이지트로닉스다.

이지트로닉스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인버터, DCDC 컨버터, 온보드 차저(OBC)뿐 아니라 급속·완속 충전기까지 자체 기술로 개발해 공급하고 있다. 강찬호 이지트로닉스 대표(사진)는 전력변환장치를 ‘사람의 심장처럼, 전자 기기에 꼭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핵심 장치’라고 설명했다.

전기차·수소차 부품 국산화
북미·중국 생산거점 확보 박차
UAM·ESS까지 산업 확장 시동
전력 기술로 지속가능성 주도

회사는통신장비용 전력장치에서 출발했지만, 전기차 산업의 부상과 함께 빠르게 방향을 전환했다. 강 대표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속에서도 기술 중심의 유연한 조직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창업 초기부터 전기차, 에너지 인프라, 모빌리티 산업 전반으로의 기술 확장을 염두에 둔 전략이었다.

이지트로닉스는 올해 초 중국 현지에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전기차 부품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지난 2023년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1회 공급망박람회’에는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참가해 기술력을 선보이기도 했다. 강 대표는 “중국 전기차 시장의 빠른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초기부터 기술과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북미 시장 공략도 본격화됐다. 이지트로닉스는 지난해 4월 미국에 생산 법



인을 설립하고, 400kW급 초급속 충전기와 두대 연계형 700kW급 충전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미국 현지 생산 체계를 통해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한 직접 공급 기반도 마련했다.

이지트로닉스는 전기차 부품을 넘어 다양한 산업 분야로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수소차, 농기계, 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등으로 전력변환 기술을 확장 적용하겠다는 전략이다. 각 산업 별로 요구되는 기술 사양은 다르지만, 기본 원리는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인프라분야로의 진출도 예고했다. 에너지 저장장치(ESS), DC 배전, 재생에너지 연계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해 전기차에서 인프라까지 연결되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강 대표는 “전력변환 기술을 기반으로 에너지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트로닉스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축은 인재다. 회사는 팀워크 중심의 문화를 지향하며, 젊은 인재들이 기술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조직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강 대표는 “기술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며, 이를 가능케 하는 조직 문화가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이지트로닉스는 올해부터 투자자 대상 홍보(IR) 활동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다소 소극적이었던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대표는 “단순한 기업 소개를 넘어 이지트로닉스가 보유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시장에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의 비전과 중장기 사업 계획, 실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전략 등 투자자들과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환 기자 kdh@

“법은 무죄, 당국은 배상”… 디스커버리 펀드, 6년 넘는 책임공방

분조위 “설명의무 위반” 판단
기업銀 최대 80% 배상 권고
대법 “기망 없다” 무죄 확정

디스커버리 펀드를 둘러싼 사법부와 금융당국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펀드 환매가 중단된 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 보호와 금융회사 책임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23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에 각각 손해배상을 권고했다. 금융당국은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판매사가 투자자 보호 원칙을 위반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반면 올해 1월 대법원은 해당 펀드를 운용한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대표의 사기 혐의에 대해 “기망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



IBK기업은행 전경. /IBK기업은행

죄를 확정하 바 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인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대표가 운용한 상품으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신영증권 등에서 판매됐다. 안정적인

고수익 투자처로 홍보됐지만, 실제로는 부실한 미국 P2P 대출 채권에 투자되며 2019년 2500억원 규모의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장 전 대표는 투자자들을 기망해 1300억원대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2022년 구속기소됐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사기 의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펀드 제안서에 ‘위험등급 매우 높음’으로 명시됐고, 수익률이 8%에 이른 시점도 있어, 전반적 기초자산의 부실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형사재판과 별개로 판매사 책임을 물었다. 분조위는 이날 대표사례 2건을 심의해 기업은행은 80%, 신영증권은 59%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두 회사 모두 펀드 구조, 담보 여부, 연체율 등 중요 리스크 정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안전한 상품이라 강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영증권은 “6개월 단위 확정금리 4.4% 상품”이라 설명해 투자자가 오해할 소지를 만든 점이 지적됐다.

금감원은 2021년 첫 조정 당시 반영되지 않았던 기초자산의 부실 정황을 추가 확인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미국 운용사가 연체이자를 신규 대출로 계상하거나 부실 자산을 액면가로 매입한 구조가 문제였고, 실제 디스커버리 측은 해당 자산을 상각할 필요가 있다고 자체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SEC 등 해외 당국에서 관련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회신이 오면서, 계약 당시의 ‘부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긴 어려웠다는 게 분조위 판단이다. 결국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은 인정

됐다.

기업은행은 투자자 성향이 ‘위험중립형’이었던 일반고객에게 높은 위험등급 상품을 권유하고, 사후에 부적합 확인서를 징구했다. 신영증권도 법인고객의 투자 목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확정금리 상품처럼 오도했다. 분조위는 이를 바탕으로 기본배상비율(30~40%)에 판매사 책임에 따른 공통가중비율(기업은행 30%, 신영증권 25%)을 더해 최종 배상액을 산정했다.

분조위 조정은 양측이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금감원은 남은 분쟁조정 신청 건(42건)에 대해서도 이번 기준에 따라 자율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미 2021년 조정으로 합의된 건에 대해서도 기업은행의 ‘추가 배상’을 기대한다는 분조위 내부 의견도 나온다.

/허정윤 기자 zelkova@